

## 청소년 상담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최 현 · 이용교 · 이춘화 · 정병오\*\*

- I. 연구의 개요
- II. 상담기관의 실태와 욕구
- III. 상담사업 활성화 방안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목적

현대 후기 산업사회에 있어서 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빈발하고 있는 일련의 사회문제들을 나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실증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 상담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에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 존재가치가 절실한 형편이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 관련 상담기관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기관의 운영실태를 살펴 보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성격별로 대별하여 보면 첫째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행정기

관의 상담실, 둘째 중·고·대학에서 생활, 학습, 진로 지도등을 담당하는 학교 상담실, 셋째 사회복지법인 혹은 기타 공익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상담실, 넷째, 전문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소수의 전문상담실, 마지막으로 라디오·TV 등 대중매체에서 실시하는 상담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중매체는 하나의 프로그램 차원의 경우이고 상담기관으로 간주하여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유형별 상담기관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청소년 상담기관의 현실태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이며 본 조사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가 하는 차원에서의 점토도 이와 아울러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 상담실을 살펴 본다. 행정기관 상담실의 경우 관장 부서별로 고립·분산적인 상담사업이 실시되고

\*이 논문은 본원의 1991년도 연구사업인 "청소년 상담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 공동연구자는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최 현(연구위원), 이용교(주임연구원), 이춘화(연구원), 정병오(연구원)임.

있는데 첫째, 보건사회부에서는 사회적 요보호 대상 계층만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상담소와 부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상담소는 18세 미만의 가출, 부랑 아동이 주요대상으로 그들의 상담조사, 판정지도, 일시보호 등을 행한다. 91년 현재 공립 13개소, 사립 3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부녀상담소는 가출, 저소득, 윤락 및 미혼모 등의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및 사후선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녀상담소는 91년 현재 109개소에서 114개소(그중 92개소는 간이부녀상담소임)로 증설 예정이며 이곳에는 664명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둘째, 노동부에서는 여성 및 근로청소년의 재반 고충상담을 위해 전국 44개소에 지방사무소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9명의 산업상담원을 두고 있다. 셋째, 경찰청에서는 전국의 가출청소년 선도 및 비행상담을 위해 전국 197개소의 경찰서 산하 청소년상담실에서 청소년선도위원 등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 대화의 광장과 시·도 청소년상담실이 재반 청소년문제의 상담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상담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보고자 하는 체육청소년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제한된 계층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도 문제발생의 예방 차원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치료적인 접근에 국한되고 있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각 부서의 관장업무에 따른 분야에만 국한됨으로써 한 인간의 문제를 인격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같은 상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부서간의 업무 협조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

며 앞서 지적한 바대로 고립·분산적인 프로그램 및 예산이 소모적으로 집행되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중·고·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상담실에 관해 살펴 본다. 현재 12학급 이상이 설치된 중학교 및 9학급 이상의 고등학교에는 학교상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고 교도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도 학생생활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김계현(1991)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 중학교는 2,429개교 중 50%인 1,422개교가, 고등학교는 1,653개교 중 82%인 1,363개교가 교도교사를 임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교통계연보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전국에 전담 교도(상담)교사는 87명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는 13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담교도교사는 교도교사 자격이수자이고 주당 수업시간도 거의 대부분이 12시간 이하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수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수적인 측면에서도 학교상담실이 거의 대부분 임기응변식의 상담교사 배치를 통하여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현실적인 면에서도 단지 학생생활지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력부족의 측면 이외에도 학교에서의 상담사업이 활성화되기가 부족한 또 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학생들이 과연 학교상담실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매일 대면하는 선생님들을 통한 학습 및 진학·진로지도 이외의 상담에 대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비밀의 보장과 익명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상담실이란 상담의 성격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전화상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우를 보더라도 학습 및 진로상담 이외의 경우에 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도 큰 예외는 아니어서 대부분의 경우 상담관련 전공교수가 보직을 맡아 이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담당 조교의 배치나 관련 대학원생이 그 운영을 실질적으로는 대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학생생활연구소에는 현재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도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다.

다음으로 민간상담실의 경우 전국에 130여개소에 관련 상담원은 594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의 비영리 공익법인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민간상담실이 청소년상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상담실도 상담사업만을 전적으로 실시하는 곳은 드물고 다른 공익사업에 부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여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전문상담실은 전공학회나 기타 관련 인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상담심리연구소, 행동과학연구소, 태화정신건강상담실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상담기관 총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청소년 관련 상담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 상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상담기관을 몇가지로 유형화하여 이들 상담기관의 상담시설, 전문인력, 자원

봉사자, 상담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상담기관의 문제와 욕구에 따라 상담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상담실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여기에 부수적으로 행정기관의 상담실(주로 아동상담소, 경찰청의 청소년상담실, 시·도 청소년상담실)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조사대상 한정 이유의 이유는 행정부서 중심의 상담실 중 청소년 대상이 아닌 경우이거나 전문상담실의 경우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관주도의 상담실의 경우에는 전문성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을 지니고 있어 상담사업의 주체로서 민간기관보다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상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이 중요한 방안이 되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부분적으로 조사하였다. 학교상담실 및 전문상담실의 경우 사전조사는 실시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 등으로 문헌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상담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이던 청소년들의 상담에 대한 욕구 조사도 병행되어야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 둔다.

## 2. 연구내용

전국 청소년상담기관의 총조사를 통한 청소년상담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선상에서의 다음의 2가지 질문은 너무도 당위적일 것이다.

첫째, 기존의 상담기관은 과연 어떻게 운영

되고 있는가?

둘째, 상담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 상담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의 경우가 부정적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문헌조사와 사전조사를 통하여 다음의 몇가지 문제제기의 항목으로 요약되어 진다.

첫째, 상담시설은 과연 상담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가?

둘째, 상담기관의 재원은 사업수행에 있어 넉넉한가?

셋째, 상담전문인력 및 상담자원봉사자를 포함하는 상담인력은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전문성 있는 상담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에 관한 교육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넷째,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활동상의 문제는 과연 청소년들의 상담욕구와 부합될 수 있을 것인가?

다섯째, 상담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은 사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여섯째, 정부의 상담관련정책은 무엇인가? 상담사업의 필요성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가?

일곱째, 그렇다면 상담사업의 활성화를 어떻게 꾀할 것인가?

이상의 항목들을 주요 주제로 또 그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부가하여 질문을 작성하여 상담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청소년상담기관에 대한 문헌이 개별 기관의 상담통계 정도의 것을 제외하면 매우 빈약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설문조사를 위해 앞서 언급했던 조사대상별로 설문개발을 위한 사전조사를 '91년 5월 중에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전조사는 주로 상담기관의 기관장 및 상담부서의 책임자와의 면접등을 통해 각 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질문의 현실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전조사를 통해 완성된 질문지를 7월 중에 우편을 통하여 전국의 조사대상기관에 배포·회수하였다.

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상담관련부서의 책임자가 하도록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상담전문직원이 하도록 하였다.

질문지가 배포된 조사대상 기관을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특별시 124개 기관, 5대 직할시에 127개 기관, 시·군 지역에 210개 기관으로 총 461개 기관이었으며 이 가운데 회수된 질문지는 155개 기관(회수율은 33.6%)이고 부실한 응답지 5개를 뺀 150개 기관이 분석되었다.

회수된 질문지는 유의미한 것만을 취합하여 편집 및 부호화작업을 거쳐 통계처리하였다. 통계처리에는 SPSS/PC를 활용하여 교차분석과 평균치, 유의도(P)등을 뽑았다.

## II. 상담기관의 실태와 욕구

본 연구는 청소년 상담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 청소년 상담기관을 조사하고 이를 상담기관 유형, 상담시설, 전문직원, 자원봉사자, 상담활동 등으로 나누어 상담기관의 실태와 욕구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상담기관 유형

전국 청소년상담기관 총조사에 응답한 150개 상담기관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상담기관을 기관의 설립주체별로 보면 정부인 경우가 34.7%이고, 다음은 사회복지법인(33.3%), 복지법인을 제외한 기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26.7%), 그리고 개인기관(5.3%)의 순이다.

조사 대상 기관에서 전체업무 중 상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5.7%이고, 상담업무 중에서 청소년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9.3%로 기관의 전체업무 중에서 청소년상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 정도이다.

기관의 재원은 정부예산과 보조금이 있는 기관이 67.1%로 가장 많고, 자체예산(64.4%), 후원금(47.7%), 사업수익(46.3%), 회비(30.2%), 개인연출(2.0%)의 순이다. 기관의 전체 예산 중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4.5%인데, 정부기관과 복지법인은 전체 예산의 각각 76.4%, 44.1%를 정부보조금에서 받고 있지만 기타 법인과 개인기관은 보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 기관은 정부보조금을 희망하고 있다.

상담기관은 전체의 32.7%가 서울에 소재하

고 있고 5개 직할시(27.3%)와 시·군(40.0%)에 분포되어 있다. 대체로 정부와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상담기관은 지방에 기타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은 서울에 상대적으로 많이 소재하고 있다.

### 2. 상담시설

상담기관은 이용자가 접근하기에 비교적 양호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상담공간이 부족하고 상담기자재가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대부분의 상담기관이 상담전용전화(80.0%)와 면접상담실(74.7%)을 갖추고 있고 회의실(강의실)(56.7%)과 전화상담실(54.7%)을 갖춘 기관도 과반수를 넘고 있으나, 전문적인 상담을 위한 놀이치료실(8.7%)과 관찰실(5.4%) 등을 갖춘 기관은 소수에 불과하다.

상담기관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된 시설은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면접상담실 등 보다 분화된 상담공간이고, 사무실과 분리된 전용상담실 등과 같이 상담전용공간을 요구한 시설도 적지 않았다. 상담공간이 다소 확보된 기관에서는 시청각 교육이나 녹음을 위한 비디오·오디오시설, 심리검사도구나 전화중복기 등 상담을 위한 기자재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3. 상담전문직원

상담기관의 직원수는 평균 22.8명이지만, 상담담당직원은 평균 4명으로 대부분의 상담실이 기관의 부속실로 존재한다. 상담전문직원수는 기관별로 차이가 많아서 전담직원이 한명도 없는 기관이 9.6%나 되고 1~2명 밖에 되지 않는 기관도 36.3%나 되어서 전문적인 상담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상담기관은 상담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부분(87.1%)이 임용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력(76.2%)과 전공학과(73.8%)에 대한 규정이 가장 많고, 상담관련 자격증(42.9%)과 실무경력(40.5%)은 덜 강조되고 있다. 학력의 경우에 대체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전공학과로는 사회복지학과(44.4%), 심리학과(31.7%), 교육학과(20.6%), 기타 상담관련학과(18.3%) 등의 순으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누가 청소년 상담의 전문가라고 자칭할 수 있고, 누구를 청소년의 전문가로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합의된 바도 없고 합의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는 어려운 과제이다. 더구나 비록 청소년 상담에 객관적 자격과 주관적 열의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임금—장시간 노동—낮은 복지수준” 때문에 장기근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담기관은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으나,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못하고 있는 기관이 43.8%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내부의 인력부족으로 보수교육을 못하는 경우(51.5%)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교육을 의뢰할 만한 기관이 없어서(20.6%)와 외부기관과 협조미비(11.8%) 등을 들고 있다.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외부기관의 교육 및 연구에 참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세미나 개최 및 참가, 내부기관의 보수교육, 상담사례연구, 각종 훈련 프로그램 등이 지적되었고, 그밖에도 슈퍼비전, 상담이론 연구, 상담기관 실무자회의, 현장 재실습 등이 요구되었다.

현재 청소년 상담관련 자격기준으로는 아동

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상담지도사, 상담요원, 임상심리상담원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가 있으며, 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의 교도교사 등이 있다. 또한 학회차원에서 발급되고 있는 상담관련 자격증으로는 한국심리학회와 상담심리전문가(상담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사)와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전문가와 임상심리사)가 있다.

법에 규정된 상담관련 자격증은 대체로 관련학과 대학졸업 정도의 학력과 근무경력을 중시하고, 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석사 이상의 학력과 전문가 지도에 의한 실습을 강조하고 있다.

상담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하여 현행 법정기준은 “전문가”란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낮은 학력과 실습의 부재가 문제이고, 학회의 기준은 전공학과와 실습에서 경직성을 띠고 있다.

#### 4. 상담자원봉사자

응답한 상담기관 중 56.7%가 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상담기관당 등록된 자원봉사자수는 평균 54.5명이고 실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수는 평균 31.6명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약 3배 정도 많다.

자원봉사자의 주된 직무는 전화상담이 84.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면접상담(74.1%), 집단상담(32.9%), 심리검사(15.3%) 등의 순인데, 상담기관의 전화상담은 대체로 자원봉사자가 맡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1개월에 평균 3.8회, 1회에 평균 3.5시간씩 봉사활동을 하고, 기관의 전체 상담업무 중 평균 44.8%를 차지하여 상담전담직원과 비슷한 양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담기관은 상담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개 소정의 자격기준을 두고 있는데(76.5%), 거의 모든 기관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전공학과(49.2%)와 연령(66.2%)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자격기준은 상담담당직원의 자격기준과 달리 엄격하게 지키기 어렵고, 시·군지역의 경우 적합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들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조되어, 봉사활동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78.8%). 문제는 교육내용인데 몇몇 유명기관을 제외하고는 20시간 이내의 교육시간으로 기관소개와 간략한 직무소개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사전교육을 전혀 실시하고 있지 못하는 기관도 21.1%나 되는데, 그 이유는 내부기관의 인력부족(44.4%)이 가장 많고, 적합한 교육훈련기구가 없어서(27.8%) 등이 주된 이유이다.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 보수교육을 하는 기관은 63.5%이지만, 보수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도 32.9%나 된다.

상담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과 보수교육이 필수적인데, 사전교육에서는 상담기초이론, 상담실습, 기관소개 등이 요구되고, 보수교육에는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실습교육이 절실하다.

### 5. 상담활동

청소년관련 상담기관은 대부분 관청이나 사회복지법인의 한 부서로서 존재하고, 상담실의 운영시간대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고

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활동이 경직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평일 오후 6시 이후까지 상담을 하는 곳은 전체의 24.6%에 불과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상담활동을 하는 곳은 4.0%(6개소)에 불과하다.

상담기관은 대부분 전화상담(96.0%), 면접상담(96.7%), 서신상담(67.3%), 집단상담(54.7%)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심리검사와 같은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1/3에 불과하고, 주된 상담주제도 가정문제, 교우문제, 정서·행동문제, 학습·진로문제, 성문제 등 거의 모든 생활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상담기관에게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상담담당직원이 상담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10.9%), 상담에 부수적인 행정을 하거나(30.6%) 상담수는 상담과 부수행정을 같은 비중으로(33.3%) 하고 있고, 심지어 잡무가 더 많은 경우도 21.8%나 되어서 큰 문제이다. 결국 상담기관의 책임자와 실무자 스스로 상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해서 비전문적이라고 평가하고(58.7%), 전문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1/3(32.7%)에 불과하다.

이처럼 상담활동이 비전문적인 이유로는 상담인력의 질적 미흡(24.2%) 보다는 시설여건 미흡(30.5%)과 근무조건 미흡(28.4%)이 지적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인력을 양성하더라도 상담기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전문인력은 상담기관에 머무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상담기관의 상담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담영역의 특성화와 함께 기관간 상호협력이 필수적인데, 현재는 기관간 협조체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로는 협조체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 III. 상담사업 활성화 방안

#### 1. 지원양식

청소년 상담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직접개입, 재정지원, 장려정책 등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상담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경우는 정부의 각 부처가 고유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청소년상담도 포함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부의 학교상담실, 보건사회부의 아동상담소(부녀아동상담소 포함), 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의 청소년상담실, 노동부 각 지방사무소의 민원상담실, 그리고 체육청소년부의 청소년대화의 광장과 시·도 청소년상담실 등이다.

청소년상담에 정부가 재정지원한 경우는 사회복지법인과 각종 공익법인이 상담사업을 포함한 각종 공익사업을 할 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다.

청소년상담에 대한 정부의 장려정책은 각종 공익법인이나 사회단체가 상담사업을 포함한 각종 공익사업을 할 때, 정부가 조세감면 등을 통하여 장려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사업을 위하여 직접개입, 재정지원정책, 장려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선 상담기관의 책임자와 실무자의 대부분은 정부의 상담정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상담기관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본다(81.3%). 재정지원을 거의 받고 있지 않은 법인은 전체의 92.5%가 정부지원이 미흡하다고 보고, 재정지원을 일부 받고 있는 복지법인도 86.0%가 미흡하다고 여긴다. 비록 정부의 상담기관이라 할지라도 전체의 2/3는 미흡하다고 보고 나머지 1/3은 그저그렇다고 하여 청소년상담기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상담기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상담기관은 사업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을 상담기관의 재정 빈곤(35.3%)이라고 보고, 다음으로는 상담인력의 전문성 부족(23.3%)과 임시위주의 교육환경(22.7%)이라고 한다. 즉 재정과 전문인력의 부족이 상담사업의 주된 장애요인이고, 교육환경과 청소년담당자의 비전문성과 같은 환경적요인이 청소년상담사업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상담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아울러 전문상담인력의 자격관리를 희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담기관은 정부에게 재정지원과 전문상담인력의 자격관리를 동시에 요구하고, 일부 기관은 재정지원만을 희망하고 있다. 재정지원만에 대한 요구는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고 있는 집단일수록 높아서 개인기관, 법인, 복지법인, 정부기관의 순으로 약해지고, 재정지원과 함께 상담인력의 자격관리에 대한 요구는 그 역순이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민간상담기관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렬하게 희망하면서도, 전문상담

<표 1> 정부에 희망하는 지원양식

	재정지원	자격관리	재정지원+자격관리	기타	무응답	합계(실수)
정 부	7.7		88.5	1.9	1.9	34.7(52)
복 지	22.0		78.0			33.3(50)
법 인	40.0	2.5	55.0		2.5	26.7(40)
개 인	50.0		50.0			5.3(8)
합 계	23.3	0.7	74.0	0.7	1.3	10,000
(실 수)	(35)	(1)	(111)	(1)	(2)	(150)

통계값 : 0.0295

<표 2> 상담기관 재정중 정부지원 비율

	0	1-19	20-39	40-59	60-79	80-99	100	합계(실수)
정 부	6.0	8.0	2.0	12.0	4.0	6.0	62.0	35.7(50)
복 지	20.0	11.1	6.6	19.9	8.8	33.3		32.1(45)
법 인	64.9	30.0	8.1		2.7	5.4		26.4(37)
개 인	87.5			12.5				5.7(8)
합 계	30.7	11.2	4.9	11.4	5.0	14.3	22.1	100.0
(실 수)	(43)	(16)	(7)	(16)	(7)	(20)	(31)	(140)

통계값 : 0.0000

인력의 자격관리등 상담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상담정책에 대한 일선 청소년상담기관의 의견은 현재 상담기관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고 아울러 전문상담인력의 자격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 2. 재정지원

대부분의 상담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강력히 희망한다. 그러면 이들 상담기관은 현재 전체예산 중 어느 정도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포함)지원으로 충당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지를 사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상담기관의 재정중 정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4.5%이다. 이 수치는 단순히 평균치이고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정부기관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정부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복지법인은 개별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정부지원을 상당히 받고 있으며, 법인과 개인기관은 사실상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명목상 지원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와 반면에 많은 상담기관은 정부보조금을

&lt; 표 3 &gt;

상담기관 재정중 희망하는 정부지원 비율

	0	1~19	20~39	40~59	60~79	80~99	100	합계(실수)
정 부	9.1	33.4	3.0	3.0	3.0	12.1	36.4	29.2(33)
복 지	2.3	4.6	4.6	13.9	7.0	30.2	37.2	38.1(43)
법 인	16.7	13.3	13.4	26.7	13.2	10.4	6.7	26.5(30)
개 인	42.9		14.3	28.6		14.3		6.2(7)
합 계	10.6	15.1	7.0	15.1	7.2	18.6	26.5	100.0
(실 수)	(12)	(17)	(8)	(17)	(8)	(21)	(30)	(113)

통계값 : 0.0277

희망해서, 상담기관의 전체예산 중 절반 이상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특히 현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명목상 지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기관의 욕구가 강했다.

상담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투자가 확대될 때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존 상담기관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상담기관의 설립 중 어디에 더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상담기관이 기존상담기관의 지원을 선택했다(85.3%). 이를 기관유형별로 보면 복지법인의 관계자는 기존상담기관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96.0%), 정부기관의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관의 설립을 선호했으며(21.2%) 법인의 경우 그 중간적인 견해를 취한다.

### 3. 전문인력양성

상담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모든 상담기관이 한 목소리로 지원을 요청하고, 그 금액은 많을수록 좋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상담인력의 양성에 있어서는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양성하고, 이를 누가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상담기관의 전문직원인 상담전문인력과 기관의 자원봉사자로 일할 자원봉사인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상담기관의 상담직원수는 기관별로 전체직원 평균 23명 중에서 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담기관이 매우 영세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상담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4년제 대학에서 청소년 관련학과를 졸업한 경우 등 매우 포괄적인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관련 자격증을 갖춘 사람은 상담직원 중 1/3정도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상담기관들이 상담직원 채용시에 청소년 관련학과를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으로 제한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상담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상담직원에 대해서 통일된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람이 전체의 88.7%로 상담직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전문상담인력의 최하수준의 자격요건에는 학력, 전공학과, 자격증, 실무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를 졸업하여 상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바람직한 최하수준이라고 한다.

한편, 전문상담인력의 바람직한 최하수준과 현재 상담직원의 채용기준 유무를 비교하여 보면, 현재의 채용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학력, 전공학과, 자격증의 기준을 바람직한 최하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대체로 실무경력의 비중을 현재보다 강화시켜야 한다고 한다.

<표 4> 전문상담인력 최하수준 비교

	자격기준	학 력	전공학과	자격증	실무경력
바람직한 최하수준	88.7	78.6	71.4	40.0	78.5
현재의 채용기준	87.1	76.2	73.8	42.9	40.5

그러나 문제는 보다 세부사항에 관한 이견이다. 학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구의 학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하자격을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인 자로 하자는 데에는 별 논란이 없으나, 전공학과와 자격관리 그리고 실무경력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지어져서 논쟁이 될 수 있다.

먼저 전공학과와 의 경우 현재 자격기준으로는 사회복지학과가 비중이 가장 높아서 44.4%이고, 다음은 심리학과(31.7%), 교육학과(20.6%) 그리고 기타 관련학과(18.3%)의 순이다. 한편 바람직한 최하수준에서는 심리학과

가 64.3%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은 사회복지학과(58.6%), 교육학과(48.6%), 그리고 기타 관련학과(32.9%) 등의 순이다.

이와 같은 현재 자격기준과 바람직한 최하수준을 고려할 때 전공학과는 응답자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를 주된 전공학과로 하고, 아동학과, 교육심리학과 등 관련학과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표 5> 전공학과 비교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관련학과
바람직한 최하수준	64.3	58.6	48.6	32.9
현재 자격기준	31.7	44.4	20.6	18.3

전문상담직원에 대한 최하수준 자격요건에 자격증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응답자 중에서도 상담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절반에 불과하고, 이들

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사회복지사(32.7%), 교사(5.3%), 카운셀러(4.7%) 등 상담만을 위한 자격증이라기보다 대단히 일반적인 것이라는데도 그 원인이 있겠다.

이 밖에도 상담관련 자격증은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전문가와 임상심리전문가가 있으나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담 분야의 경우 자격증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을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위론적인 논의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 전문상담인력의 자격관리와 전문적인 훈련을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몇가지 의견이 있다.

첫째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기관에서 전문인력의 자격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관리는 국가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국가가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같은 공익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이 방식은 전문인력의 자격증에 대한 공공성을 높일 수 있고, 이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된다.

둘째는 상담기관 협의체가 부설 상담원교육기관을 통해서 상담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상담인력 자격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인력관리의 주체인 상담기관의 협의체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담기관의 협의체보다는 그 구속력이 더 강한 상담기관의 연합체에서 자격관리를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들은 국가의 관심표명은 상담기관협의(연합)체가 상담원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 후원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는 상담관련학회가 전문인력의 자격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상담 관련학회에는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학회, 임상심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가족치료학회 등이 있고, 앞의 두 학회는 독자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끝으로 소수의견이지만 4년제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서 상담원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상담기관이 각자 독자적으로 상담원을 양성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대부분의 상담기관에는 전문인력이 많지 않고, 있더라도 다른 전문가를 교육시킬 만큼

〈표 6〉 전문상담인력의 자격관리와 훈련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기 타	무 응 답	합계(실수)
정 부	1 9	9 6	11 5	40.4	7 7	23 1	3 8	1 9	34 7(52)
복 지	6 0	36 0	14.0	28 0		14 0		2 0	33 3(50)
법 인	5 0	27 5	20 0	22 5	7 5	10 0	2 5	5 0	26.7(40)
개 인		37 5		12 5		37 5		12 5	5 3( 8)
합 계	4 0	24 7	14 0	30 0	4 7	17.3	2 0	3 3	100.0
(실 수)	(6)	(37)	(21)	(45)	(7)	(26)	(3)	(5)	(150)

통계값 : 0 1077

비고 : ①상담기관 각자 독자적으로 ②상담기관 협의체 부설 상담원 교육기관 ③상담기관 연합체 부설 상담원 교육기관 ④공공법인이 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기관 ⑤4년제 대학의 대학원 ⑥전문상담관련학회

의 자격을 갖춘 인력이 적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한 견해로 보인다.

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관 중 56.6% (85개 기관)가 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어서, 상담자원봉사자의 양성은 상담기관의 큰 업무 중의 하나이다.

현재 상담자원봉사자의 양성과 자격관리에 대한 통일된 규정은 없다. 대체로 각 상담기관이 필요에 따라서 상담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상담기관 등 복지기관에 공급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상담자원봉사자만을 양성하여 다른 기관에 공급하는 상담원 양성기관은 없는 셈이다.

상담기관들은 대체로 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두고 있는데, 4년제 대학졸업(일부 고졸 이상)의 학력에 상담관련 전공학과를 나온 25세 이상인 자를 바람직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많은 상담기관이 상담자원봉사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관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절대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전화, 사랑의 전화 등 주로 전화상담을 위주로 한 기관에서는 상담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문제는 개별 상담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기관이 많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많은 상담기관은 상담기관의 협의체(또는 연합체)에서 상담자원봉사자를 공동으로 양성시키고 자격관리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상담자원봉사자의 자격관리는 중앙협의체보다는 시·도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는 전문상담인력의 훈련을 중앙이나 시·도 수준의 협의체에서 하는 의견과 비교할 때, 흥미로운 사실이다. 즉 전문인력의 관리는 중앙에서 하더라도,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시·도 또는 시·군·구 등 생활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4. 협력체계

상담기관 책임자와 실무자들은 상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담기관의 전문화, 상담기관간의 전달체계화, 지역별 상담기관협의(또는 연합)기구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기관간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이를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상담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안이다. 이 안은 각 상담기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상담기관간의 업무협조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공익법인의 형태로 협의(또는 연합)기구를 설립하자는 안이다. 이 안은 상담기관간의 공동관심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공성이 있고 구속력이 강한 공익법인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상담기관의 연합체로 운영하자는 안이다. 이 안은 상담기관의 독립성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체와 공익법인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갖는 형태가 좋겠다는 것이다.

넷째로 소수의 의견이지만 정부의 직접간여하에 협의(연합)기구를 운영하자는 안이다.

<표 7>

상담기관 협의기구의 성격

	민간기구협의체	민간기구연합체	공공법인	정부운영	무응답	합계(실수)
정 부	18 0	22 0	34.0	20.0	6.0	34 0(50)
복 지	57 1	18 4	18.4	6 1		33 3(49)
법 인	42 5	15 0	25 0	10 0	7.5	27 2(40)
개 인	50 0	12 5	25 0		12.5	5.4( 8)
합 계	39 5	18 4	25.9	11 6	4 8	100 0
(실 수)	(58)	(27)	(38)	(17)	(7)	(147)

통계값 : 0 0311

위의 네가지 안은 상담기관간의 협력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상담기관은 설립 또는 운영주체에 따라서 정부, 복지법인, 기타 법인, 민간 등으로 다양하고, 그 이용대상자도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통일된 협력체계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상담기관의 협의체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상담기관간의 협의(또는 연합)기구를 설치할 때, 그 설치의 행정단위는 어디까지가 적정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각 시·도 단위에 1개소씩 설치하는 안과 각 시·군·구 단위까지에 1개소씩 설치하는 안이 비슷한 비중으로 선호되었다.

시·도 단위에 1개소씩 필요하다는 의견은 협의기구가 광역자치단체의 수준에 설치되어서 지역의 공동현안이 합리적으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입장이다. 또한 대부분의 상담기관이 대도시와 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볼 때 협의 수준은 시·도가 적합하다는 견해이다.

시·군·구 단위에 1개소씩 필요하다는 의견은 협의기구가 기초자치단체의 수준까지 설치되어서 동일지역 내에 있는 상담기관이 각기

<표 8>

상담기관 협의기구의 설치단위

	전국 1개소	특별시·직할시·도단위	시·군·구단위	무응답	합계(실수)
정 부	6.0	36 0	56.0	2 0	34 2(50)
복 지		50 0	50 0		32 9(48)
법 인	2 5	57 5	32 5	7 5	27 4(40)
개 인		50 0	37 5	12 5	5 5( 8)
합 계	2 7	47 3	46 6	3 4	100 0
(실 수)	(4)	(69)	(68)	(5)	(146)

통계값 : 0 1049

특화된 상담사업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이다.

설치단위에 대한 양 입장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담기관이 대도시와 시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서 군의 의미가 약하고 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 동일 통화권이기 때문에 구의 의미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담기관간의 협의기구의 출발은 중앙에 1개소와 시·도 단위에 1개소씩이 적합하고, 장차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될 때 시·군·구 단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면 상담기관 협의기구의 업무는 무엇으로 하고 단위별 담당업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지금까지 상담기관 협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그 협의기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 협의(또는 연합)기구의 업무(안)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을 상담기관의 책임자와 실무자의 의견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하였다.

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사실은 기존상담기관의 책임자와 실무자는 상담업무의 조정, 전문상담인력의 훈련, 상담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상담기법·교범의 편찬·발간, 자원봉사자의 훈련, 자격증 교부, 전문치료센터의 운영, 상담활동의 홍보, 기관간의 유기적 관계망 구성, 정보센터 운영, 실제상담, 직원간 교류활성화, 긴급 일시보호소의 운영 등 예시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길 희망하였다. 또한 협의(또는 연합)기구는 설치단위별로 다음과 같이 특화된 사업을 하길 희망하였다.

중앙기구는 상담기법·교범의 편찬·발간, 상

담인력에 대한 자격증 교부, 전문상담인력의 훈련, 상담에 대한 재정지원, 청소년관련 정보센터 운영 등 상담인력에 대한 자격관리와 상담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정보지원 기능을 수행하길 희망하였다. 반면에 실제 상담사업과 일시보호소의 운영, 상담업무의 조정 등 일선 상담기관이 할 일에 대해서 중앙기관이 간여하지 않길 요망하였다.

시·도기구는 협의기구에 부여된 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기구에 적합한 몇가지 일을 제외하면 시·도 기구는 정보센터 운영, 관계망 구성 등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군·구의 업무는 실제상담업무, 상담활동의 홍보, 상담직원간의 교류활성화, 기관간의 관계망 구성, 긴급 일시보호소의 운영 등에 대해서만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표시하였다.

상담기관 협의(또는 연합)기구에 대한 상담기관 책임자와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할 때, 중앙기관은 인력의 자격관리, 재정지원, 정보지원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시·도 기구가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시·군·구 기구는 실제상담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지금까지 논의된 상담기관의 모든 현안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가지의 방법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상담기관의 가장 큰 문제가 재정취약과 전문인력의 부족 그리고 기관간 협조체제의 미흡이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과 시·도 청소년상담실의 증설과 활성화는 매우 적절한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표 9〉

상담기관 협의기구의 단위별 업무

	중앙	시·도	시·군·구
청소년 상담업무의 조정	42 2	62 6	38 8
전문상담 인력의 훈련	60 3	68.0	25 9
청소년 상담에 대한 재정지원	59 2	73 5	43 5
청소년 상담기법·교범의 편찬, 발간	72 8	45 6	14 3
상담자원봉사자의 훈련	42 2	70 7	35.4
상담인력에 대한 자격증 교부	69 4	42 9	12 2
전문치료센터의 운영	53.1	74 8	34 0
상담활동의 홍보	55 1	70.7	67 3
상담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망 구성	57 1	78 2	57 1
청소년관련 정보센터 운영	58 5	83 7	34 7
실제 상담업무	20 4	54 4	81.0
상담직원간의 교류 활성화	46.9	75 5	59 9
긴급 일시보호소 운영	23 1	59 9	57 1

## 참 고 문 헌

- 강문희, 정옥환(1988), 상담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상담실.
- 김계현(1990), 카운슬링의 실제, 성원사.
- 김계현(1991), "상담서비스 실태 및 상담요원 교육현황 조사", 상담과 지도, 한국카운슬러협회.
- 김미숙(1989),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 임(1990), 한사람, 상담원이 되다, 하나의 학사.
- 김정환(1983), 생활지도, 서울:형설출판사.
- 김영호(1979), "복지사회실현을 위한 Volunteer 활동의 방향 모색", 사회복지 통권 63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김형태(1990), 학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한남대학교 출판부.
- 남대문지구 청소년지도육성회 청소년상담실(1989), 청담 창간호
- 노 혁(1990), 전화상담론, 사랑의 전화 출판부.
- 변창남(1986), "한국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보건사회부(1991), 부녀복지사업지침.
- 사랑의 전화(1991), 전화상담원을 위한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사랑의 전화 출판부.
- 서울 YMCA 청소년상담실(1991), YMCA 청소년상담실 7년간 활동보고서.
- 서울특별시경찰국(1988), '88서울의 청소년 -'87소년경찰활동실적중심-

- 서울특별시(1991), 부녀복지행정.
- 서울특별시 부녀상담소(1990), 부녀상담사례모음집.
- 이장호(1989),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박영사.
- \_\_\_\_\_, 청소년상담실의 운영방안,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구소.
- 정영운(1990), “심리학 분야에서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청소년연구원.
- 정영희(1988),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옥환(1987)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상담봉사자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체육부(1990), 청소년백서.
- 체육청소년부(1991), 한국청소년기본계획.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종합상담실 '90 상담활동 보고서.
-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편)(1989),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서울: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한국심리학회(1990), 한국심리학회요람.
-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상담실(1984), 사랑방—청소년상담실 1주년보고서.
- 한국카운슬러협회, 상담과 지도, 각년도
- 현대사회연구소(1984), 자원봉사실태조사연구, 서울:현대사회연구소.
- Lester D, Brockopp G. W. (ed)(1973), *Crisis Intervention and Counseling by Telephone*, Spring Field:Charles C Thomas.